

##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여부 논쟁보다 기능 극대화 시급

통합 7년만에 다시 논란... 위상과 지원 규모 타 지역보다 크게 못미쳐 연구기능 총괄·인력 재정 뒷받침·기관 대우 격상 등 과제 먼저 풀어야

지난 2015년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통합·운영되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7년만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 초광역 미래 구상, 관광·기반시설 등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 하나로 합쳤으나, 광주와 전남의 여건이 다르고 개별정책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 출연금이 가장 적고, 연구 인력도 부족하다. 사도가 수시로 긴급과제를 납부하는 등 그 위상마저 불안한 연구원을 다시 쪼개 운영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의 단순 용역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지역 미래와 직결되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산업, 에너지, 인공지능, 문화예술, 정보통신 등과 관련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연구 기능을 총괄할 수 없어 연구 과제 수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싱크탱크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 차원 특단의 대책과 함께 '고차원의 연구 기능 수행'이라는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뒤, 연구원의 분리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22일 광주전남연구원 등에 따르면 1991년 전남 발전연구원이 출범한 뒤, 1995년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07년 분리됐다. 2015년 다시 통합됐다. 지난 2007년 분리 과정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간 원장 인선 등을 둘러싼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으며, 이후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각각의 지역만을 대변해 연구 성과를 내놓으면서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갈등만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당시 윤창현 광주시장 후보와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가 연구원 통합에 합의하고 당선된 뒤 이를 추진, 분리 운영 8년만에 통합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책, 용역, 자체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통합 연구원에 대해 양 사도의 불만이 높아진 것은 민선 7기 들어서다. 광주군공항 이전, 혁신도

시 공동발전기금 운용, 나주SRF 가동 등 공동 현안에서 사·도 간 갈등이 부상했으나, 사·도의 개별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최적의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는 연구원이 사·도의 눈치를 살피며 통합 운영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다. 의견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장이 지난 10월 11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의 통합 운영에 대해 "(계속해서 통합 운영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 발언하고, 이어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전남도의원들도 잇따라 분리를 주장하면서 '분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광주·전남 각각의 특성에 맞춰 연구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원의 '한계'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통합 연구원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면서 출연금을 연구원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고, 사·도의 각종 과제를 수시로 위탁하는 등 지역 최상위 싱크탱크의 위상을 사·도가 앞장서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또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광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가진 연구기능을 총괄하는 등 기능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도 등한시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9월 현재 연구직이 38명에 불과하다. 이는 충남(58명), 경남(39명) 등보다도 적고, 비슷한 여건의 대구경북연구원(67명)의 3분의 2 수준이다. 출연금은 사·도 각각 1년에 35억원씩 70억원이며, 이는 충남(75.2억원)보다 작고 대구경북연구원(86억원), 대전세종연구원(89.7억원), 인천(114.4억원) 등에는 크게 못 미친다. 연구원이 다시 분리된다면 제주(24명, 44억원), 전북(29명, 51.3억원), 충북(30명, 42.7억원) 등보다도 소규모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광주시와 전남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리 주장과 관련 전체적인 시스템은 통합 형태로 가되 광주와 전남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분부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기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분리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할 단계는 아닌 듯하다"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 연구원이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말라가는 광주 식수원 동북댐

22일 오후 화순군 이서면 동북댐.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댐이 가장자리부터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북댐이 31%의 저수율을 보이는 가운데, 가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광주시의 제한급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화순=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중국 OTT 시장에 한국 영화 서비스 재개

한한령 이후 6년만에

대통령실은 최근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가동된 이후 6년 만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2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

에서 "중국 OTT에서 우리나라 감독의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했다"며 "6년간 중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한국 영화 서비스가 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문화·인적 교류 중요성,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OTT 조치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정상회담 비공개 논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면서 민간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시 주석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양국 정상 의미 있는 회담 성과를 토대로 중국의 수입금지 해제와 같은 적극적인 미래가 전개될지 기대하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한국형 사드' L-SAM, 미사일 요격시험 첫 성공

2026년 양산 목표 개발 순항

군 당국이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첫 요격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최근 L-SAM으로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 발

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성공했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로 꼽힌다.

L-SAM은 율해 2월 초 표적 없이 미리 설정한 궤도를 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비행 시험이 진행될 바 있다.

당시 발사된 L-SAM 요격미사일은 계획한 탄

착점에 정확히 떨어져 비행시험은 성공적으로 평가됐고 이후 약 9개월 만에 2단계에 해당하는 표적 요격시험까지 성공했다.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60km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15~40km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천궁-II'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체계가 구축된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전남사랑 전남품(愛)

## '내가 사는 전남(愛) 주소찾기'로

### 고향 사랑을 실천해주세요

**대상** 실제 전남에 생활하면서 아직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도민

**방법** 민원24누리집, 주민센터 방문, 찾아가는 주소이선 서비스(단체, 기관)